

주52시간제 기업 현장 안착 '온 힘'

도, 현장 대응방안 보고회 업종별 추진상황 등 점검 우범기 정부부지사 "지속 관심·소통으로 안착 지원"

전북도가 우범기 정부부지사 주재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업종별 추진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도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노·사 부담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 준비 동향, 대 대응계획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보고, 각 실·국 관리 업종별 동향 및 지원 대책 보고,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은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2019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년 1년의 제도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우범기 정부부지사 주재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업종별 추진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정이다.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의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준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500개 사) 중 준비 중인 기업이 18.4%, 준비 여건이 안 된다는 기업이 7.0%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각 실·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 파악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지원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종별 협의회, 업무 회의, 현장 지도시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일하기 어렵게 하기 지원사업 등 신규제출 및 임금 보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 컨설팅 지원 ▲근로인 안착을 위한 인력 지원을 위한 기업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준비 취약 기업을 발굴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등과 연계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돼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대응 주관부서장인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업종별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도, 오늘 '서해수호의 날' 비대면으로 진행

전북도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를 비대면 추모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지 6선을 맞이하는 해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는 정부기념일이다.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념행사는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라는 주제로 60여 개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주, 정읍, 부안 재향군인회관 등의 전광판에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군 장병의 명예 선양과 한탄도 평화 수호의 의지를 모으는 ▲유족에게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 전달, ▲국군에게는 평화수호 의지를 다지고 사기진작, ▲도민에게는 애국심 함양을 통한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유호상 기자

생동감 넘치는 전주 변화 기대감 고조

민주 김윤덕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 의원은 "오늘 수소 사용자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수소사용자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 원주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청신호가 켜지며, 지역 경제 발전 및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이번에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도심과 구도심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그동안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비하였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 국회 통과

민주 이원택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직선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 등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뤄져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도의회의장,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TF 단장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 단장에 위촉됐다. 전국시도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를 구성하고,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건의 및 협회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단장은 송 의장이 맡았으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TF위원에 선임됐다. 송 의장은 "앞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단체개발내내에 지방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화폐 포함

민주 신영대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 거래 및 가치가 증감하면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특히,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탈세 목적 등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 재산 등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

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었으나, 25일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된 데에 따라 이를 준용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거래가 활성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회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가상자산이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해기사 음주축정 거부시 면허취소 처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선박직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상음주축정 거부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해 해기사들의 음주축정 거부가 줄어들어, 해상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안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축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축정 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안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축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축정 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안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축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축정 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안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축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축정 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안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축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축정 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안 나선 후 5개월만에 해상음주축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축정 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기초의회 소식

전북 시·군의장들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을"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는 25일 익산시 의회에서 제261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회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 산단 간 화물물동량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 안을 반드시 반영해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에서 철도수송 체계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박선전 전주시의원,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박선전 전주시의회 의원이 25일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는 지난달 미안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챌린지다.

이날 박 의원은 "미안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미안마 군부의 폭압에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미안마 군부를 향해 국민들을 향한 총부리를 즉각 거두고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사명을 더이상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